# "전북 제3금융중심지 보류'눈치보기?'"

평화당 김광수 의원, "민주 총선 전략지 부산 · 경남 우선 감안 정치적 결정" 질타

민주평화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국회 김광수 의원(전주 갑)은 12일 금 용중심지추진위원회가 밝힌 '제3금융 중심지 유보 의견에 대해 "이번 금융 위원회의 제3금융중심지 보류결정은 '사실상 반대'로 총선을 앞둔 부산・ 경남 눈치보기"라며 "청와대와 민주 당은 전통적인 표밭인 전북보다는 총 선 전략지역인 부산 경남지역을 우선 적으로 감안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 고 말았다"고 강력 질타했다.

이어 "전북도민들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은 청와대와 민주



당은 도민들 앞 에 이 사태에 대 한 명확한 입장 을 밝히고 도민 들을 우롱한 것 에 대해 석고대 죄해야 할 것"이 라고 촉구했다.

김 의원은 "부 산은 선박 금융과 파생상품, 백오피스 등에 특화된 금융중심지이고 전북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을 중심으 로 자산운용형으로 특화된 금융중심

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이 다 르다"며 "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의식해 기존 금융중심지에 미치는 영 향을 중점적으로 감안해 판단한 것으 로 밖에 볼 수 없다"고 지적했다.

또한, 김 의원은 "주지하다시피 전 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약속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도 담겨져 있는 전북도민들과의 맹 약"이라고 강조하고 "그러나 청와대 와 민주당에 '제3금융지지정이 실패 한다면 도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

할 것을 반복적으로 강력 경고 했음 에도 전북도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총 선을 앞둔 시점에 부산 · 경남 지역챙 기기만 골몰했다는 것이 밝혀졌다"고 비판했다.

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기 보유 주식 6억원어치 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자는 이날 오후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.

이와 함께 남편 오충진 변호사 소유 주식을 모두 처분할 의사도 밝혔다. 앞서 오 변호사는 지난 10일 "이 후보 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보유 주식을 모두 조건없이 처분하겠다"는

이 후보자는 전체 재산의 83%에 달 하는 35억여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됐다. 특히 이 후 보자와 오 변호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재판을 맡으면서 내부정 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 기됐다.

끝으로 김 의원은 "날씨는 풀렸지만 전북 천년지대계(千年之大計)인 제3 금융중심지의 앞길이 청와대와 민주 당의 무관심속에 미세먼지 가득한 거 리처럼 답답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 다"며 "이번 제3금융중심지 지정 보 류는 '전북 패싱'으로 '전북발전에 대한 훼방행위'에 불과하며, 여건이 갖춰지면 논의하겠다는 말로 슬그머 니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"고

# 이미선 헌재판관 후보 보유 주식 모두 처분

주식 과다 보유 및 불법 주식거래

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다.

###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석

# "지역산업의 체질개선 필요"

#### 농산경제위, 전북도와 4차산업혁명 대응방안 모색

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(위원 장 강용구)와 전북도가 지난 12일 도 의회 세미나실에서 '4차산업혁명 대 응마련을 위한 심포지엄'을 공동으로 개최했다.

심포지엄에서는 수도권 소재 기업 등 4차산업 관련 업체 8곳이 참여한 가운데, '4차산업혁명시대 전북도 대 응전략 과 이에 걸맞은 '전북도 투자 유치 전략'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 로 이뤄졌다.

참석한 업체로는 서울 소재 디지털 문화콘텐츠 분야의 180명의 직원을 거느린 ㈜매크로그래프, 전기차 SW 플랫폼 분야 전문기업인 ㈜오큐브, IoT안전보호분야 선두주자인 (주)세이 프웨어 등과 도내 기업인 ㈜일렉토 르, 시온테크 등이 함께 했다.

이밖에 전북테크노파크, 자동차융합 기술원,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 도내 R&D분야 출연기관 전문가들이 참석 해 참여 기업들과 함께 자율주행차와 드론, IoT 및 디지털 문화콘텐츠 분야 등에서의 전북의 대응전략을 공동으 로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.

이날 좌장을 맡은 강용구 위원장은 "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산업 시 대에 전북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에서 벤처창업기업 유치와 육성을 통 해 중소・중견 기업으로 성장시켜나 가는 지역산업의 체질개선이 필요하 다"고 강조했다.

유희숙 혁신성장산업국장은 "전북 의 대도약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 이 대표적으로 '홀로그램 융합신업' 과 '안전보호 융복합섬유산업'의 거 점화,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"면서 아이디어 교류의 장인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했다.

발제에 나선 전북TP의 이광헌팀장 은 농생명식품 등 5대 성장동력산 업과 전기차 등 혁신성장동력의 결 합을 통한 전북의 혁신성장동력 육 성을 위한 진행상황과 추진과제를 설명했다.

심포지엄에 참석한 4차산업 선도기 업들은 각 분야별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, 공동 테스트베드 설치 등을 제 안했고 전북에 추가적인 투자유치 의 지도 시사했다. /김진성 기자

#### 문건위, 소년체전 · 장애학생체전 준비상황 점검

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(위 원장 정호윤)는 지난 12일 전북도체 육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 항 청취와 시설 운영상황을 점검했

이날 위원들은 오는 5월 도내에서 개최 될 제13회 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대회 준비상황과 경기장 등의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을 확인했다

정호윤 위원장은 "올해 전국소년 체전 및 장애학생체전이 도내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"면서 "안 전한 체전, 성공적인 체전 개최를 위해 홍보는 물론 경기장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"을 주문 /김진성 기자



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(현지시각)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

# '북미 대화 의지 확인'문 대통령, 중재'속도'

#### 한미 정상회담 이후

靑, 조만간 대북 특사 파견 남북 정상회담 제안할 듯 트럼프 방한 성사되면 남북→한미→북미 회담 비핵화 협상 급물살 가능성

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향을 확인하 면서 '중재자'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발걸음에도 속도가 붙게될 것으로 보인다.

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북미간 입 장치를 좁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 인다. 북한의 대화 의지를 확인하고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논의를 하기 위해 조만간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 으로 보인다.

14일 청와대와 여권 등에 따르면 한 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 통령과 청와대 외교・안보 라인은 비 핵화 중재의 다음 단계로 대북 특사 파격을 준비하고 있다. 대북 특사로는 서훈 국정원장,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 보실장,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이 거 론되고 있다.

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 서 "이번 대북 특시는 기존에 북한과 대화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 북한에서 신뢰할 만한 인물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"고 말했다.

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 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 담 계획을 소개했다.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또는 남북 간 의 접촉을 통해 우리가 파악하는 북 한의 입장을 가능한 한 조속히 자신 에게 알려달라며 관심을 보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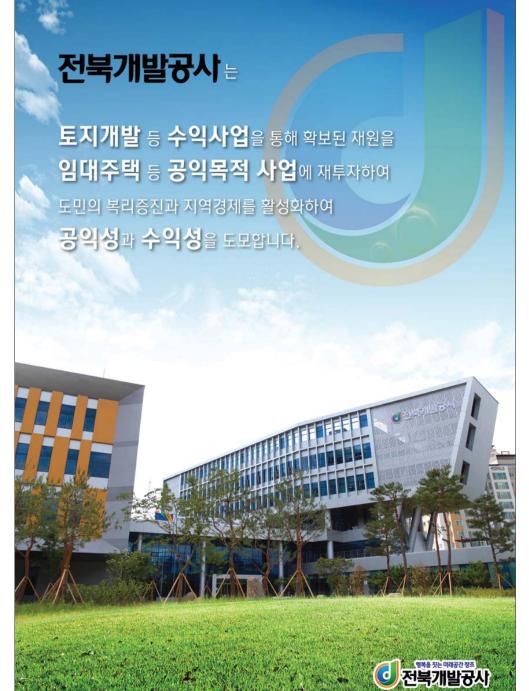
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 통령은 미국 측 외교·안보 라인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사 를 밝혔다.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외교・안보 라인의 핵심 관계자 들이 대화 모멘텀을 살려야 한다는 데 동의한 점도 이번 정상회담의 성

북한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과 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 다.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회의에 참석 해 시정연설에서 "올해말까지는 인내 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"이라며 "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 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 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 수뇌회 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

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"고 말했다. 양측의 대화 의지를 확인한 문 대통 령의 발걸음도 바빠졌다. 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북미 정상 간 대화를 재개하고 양측의 입장치를 좁힐 것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.

현재 미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일 괄타결식 '빅딜'로 해결하지는 입장 인 반면 북한은 단계적으로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주고 받는 '스몰딜'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.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'굿 이너프 딜'을 만들어내기 위해 양측 을 설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. 북미가 비핵화의 모든 프로세스가 담긴 로드 맵을 작성하고, 이에 대한 포괄적 합 의를 먼저 이룬 뒤 단계별로 상응 조 치를 교환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.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영 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풍계리 핵실 험장 검증 등 '알파(a)'를 수용해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.

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제안했다. 청와 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제안에 사의(謝意)를 표시했다고 전했다. 트 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성사될 경우 남북→한미→북미 정상회담이 연쇄적 으로 열리면서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 을 탈 가능성이 있다.



## 민주당, '문 대통령 가짜뉴스'고발… "유포자 75명 확인"

더불어민주당이 강원 속초・고성 산 불 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'가짜 뉴스'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.

민주당은 지난 12일 오후 허위조작 정보 89건과 김 의원 등 유포자 75명 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 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.

민주당 측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 기 전 취재진에게 "국가적 재난이

발생했는데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의도적으로 배포하는 것 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"고 밝혔다.

앞서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 위원회(위원장 박광온)는 지난 10일 '문 대통령이 술을 마시거나 보톡스 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. 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89건에 달한다 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.

또 김 의원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

서비스(SNS) 페이스북에 이 같은 가 짜뉴스를 올린 것을 두고 "면책 특권 에 기대 허위 조작 정보를 정치적으 로 악용하고 있는 것"이라고 지적한

특위 소속 권칠승 의원은 "최근에 유튜브,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서 가짜뉴스 배포가 굉장히 많아졌다"며 "우리 사회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해 당에서 과감히 대처 하기로 결정했다"고 말했다. /뉴시스

전주매일 홈페이지 www.jimaeil.com